

# 영등위 위원 수취사건 실체와 교훈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리가 지난달 16일 검찰에 적발됨에 따라 등급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영등위 수취파문이 전근대적인 심의시스템 때문에 야기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민간자율심의에 대한 논의도 한층 무르익고 있다. 영등위 수취파문을 둘러싼 사건경과와 개선방향을 살펴봤다.

글\_장지영 전자신문 기자

**영**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위원이 역대 뇌물을 받고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영등위 비리가 현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모 아케이드 게임개발사로부터 등급심사와 관련해 역대급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의장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모씨는 이 게임사로부터 7개월간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씩 받아온 데다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등급심의를 빌미로 사욕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같은 개발사로부터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수취한 영등위 아케이드 게임 소위원회 소모 위원도 적발함으로써 영등위 위원들이 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 영등위 역대 비리 왜 터졌나

이같은 영등위 역대수취 사건이 터지자 게임업계는 물론 네티즌이 영등위의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거세게 항의, 영등위는 출범 6면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아케이드 게임 소위원회 심의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한데 이어 급기야 김수용 영등위 위원장이 임기 몇개월을 남기고 불명에 사퇴했지만 영등위를 향한 불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등급분류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심의제도의 대개혁 없이는 더이상 영등위에 심의를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취파동이 지금까지 불투명했던 영등위 위원 인선과 운영방식 등을 들어 이미 예견됐던 구조적 비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등위는 그동안 새로운 심의위원이 구성될 때마다 불투명한 인사 관행으로 업계로부터 의혹을 한몸에 받아왔다. 심의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원 선임을 영등위와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의 추천에만 의존하면서 '밀실인사'라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한번 선임된 위원은 1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소위원회를 옮겨가며 연임하는 사례도 비밀비재해 로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외에도 전문성을 이유로 언론인 등 업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가 심의위원으로 대거 포진하면서 로비뿐 아니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여지를 제공하는 등 주먹구구식 인사가 비리를 한껏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투명한 심의시스템, 모호한 심의기준 등도 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등위 소위원회는 7~9명의 소수위원이 참여, 비공개로 진행돼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 더구나 심의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거나 공개되지 않아 로비를 받은 몇몇 위원이 담합하면 얼마든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허점을 갖고 있다.

일본게임등급분류기구인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의 경우 20~25명 가량의 위원을 두고 게임별로 4명 이상을 추천해 등급분류를 맡기는 풀(Pool)제 방식을 취하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또 게임과 관련한 심의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심의위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심의위원회에 입맛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등위는 지난 2002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18세이용가 등급을 받을 때도 PK(Player Killing,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공격해 죽이는 행위)의 폭력성이 문제가 됐지만 정작 PK의 폭력성이 18세이용가를 삼을 정도인가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적용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등급분류제도 대개혁 논의 '급물살'

영등위 전·현직 심의위원의 수취파문으로 등급분류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영등위 수취파문이 전근대적인 심의시스템 때문에 야기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현



재의 영등위로는 더이상 등급분류를 시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심의에 대한 논의도 한층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등급분류제도 개혁의 논점은 어디서 등급분류를 하는가 보다 어떻게 등급분류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자율이든 현재의 법정기구인 영등위이든 심의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수뢰파문과 같은 비리가 일어날 개연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대 유승호 교수는 “등급분류를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명제에는 민간자율과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공기관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문제는 영등위처럼 불투명한 심의위원 인선, 민주주적인지 못한 심의과정, 로비에 취약한 구조 등이 재현된다면 어디에서 하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개발원 김민규 박사도 “지금의 영등위가 심의를 계속하더라도 조직구성부터 운영 프로세스를 완전히 뜯어고치면 지금의 영등위와 전혀 다른 제2의 영등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 및 소비자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전제로 현재의 영등위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비영리단체인 민간자율기구가 심의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영등위는 일

제시대와 군사정권시절 체제유지를 위해 문화콘텐츠를 사전에 검열해온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심의시스템은 검열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한데다 이미 수십년동안 시행하면서 사회적으로 검증받은 상태라 더욱 설득력을 갖고 있다.

우선 미국의 ESRB와 같은 비영리단체에 의한 민간자율심의의 경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심의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ESRB와 같은 민간자율심의는 법적 강제력이 떨어져 업체가 굳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도 심의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는 등 법적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이 흠이다. 따라서 기업이 심의를 받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거나 소비자들도 심의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높은 시민의식이 수반돼야 이 제도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희대 권준모 교수는 “민간자율심의는 지금 당장 불가능하더라도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도기적 기구를 갖더라도 점진적으로 민간자율기구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심의체계를 골자로 한 유럽식 모델도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승호 교수는 “한번에 끝나는 심의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결점을 갖고 있다”며 “유럽처럼 전문가그룹과 배심원제와 같은 일반 시민 그룹이 두 차례에 걸쳐 심의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18세이용가나 등급분류 등 민감한 판정의 경우 두 개 그룹으로부터 똑같은 판정을 받았을 때만 등급을 결정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등급분류기관의 독점으로 인한 부패를 막기 위해 복수의 등급기관을 양성화하자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뢰파문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면 등급기관을 바로 교체함으로써 등급기관 경쟁에 의한 심의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성신여대 함승흠 교수는 “문화부가 입법 추진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초안에는 문화부 장관이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돼 있어 복수의 등급분류기관이 등장하면 이같은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민간자율에 의한 등급분류를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현재 상황에 맞춰 과도기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민간자율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기업의 역량이나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기적 체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영등위 체제를 유지하되 민간자율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등급분류기관을 조기에 출범시켜 병행 운영하다 민간자율기구로 대체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